

현안과 과제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 중산층의 55%는 저소득층이라 생각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 괴리 분석의 필요성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하다. 중산층에 대한 OECD 기준(OECD기준 중산층)과 국민 인식(체감중산층)의 괴리가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불안과 불만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중산층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황

(소득·자산에 대한 국민인식) 통계청에 따르면 OECD기준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4인 가족 기준)은 약 354만원이고 자산규모는 약 2.5억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은 약 500만원, 자산규모는 약 7.8억원으로 괴리가 크다.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OECD기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54.9%에 달했다. 특히 남성 가구주면서 고령층인 비정규직·자영업자 중에서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괴리의 원인

(가계수지)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적자가구(수입<지출)인 경우,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5.0%에 달해 흑자가구(수입>지출)의 37.1%를 크게 상회하였다.

(체감물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을수록 괴리가 심각하였다. OECD기준 중산층임에도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체감물가가 5.7%에 달한 반면, 본인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체감물가가 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자리의 질)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응답자가 78.8%에 달해 일자리의 질이 높은 응답자의 21.4%를 크게 상회하였다.

(주택보유)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69.9%에 달하는 반면, 1주택자는 50.6%, 다주택자는 41.3%였다.

(노후준비)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노후준비가 안된 경우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응답자가 67.1%에 달하는 반면, 노후준비가 잘된 경우에는 31.3%로 격차가 컸다.

■ 시사점

중산층 스스로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물가 및 주거 안정을 통해 가계수지 개선을 지원하며, 셋째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인식하는 만큼, 세제개편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이들의 계층의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괴리 분석의 필요성

- 최근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정부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층의 상한선(중위소득의 1.5배)이 연소득 5,500만원이라고 발표 (약 1,800~5,500만원이 중산층)
 -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소득수준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아 갈등을 빚음
 - 정부 기준으로 중산층(연소득 1,800~5,500만원)인 국민 상당수는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생각
 - 또한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대다수도 스스로를 중산층이거나 저소득층이라 인식
- 설문조사를 통해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중산층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방안 모색
 -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 비중이 두텁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
 -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은 강력한 생산주체이자 소비주체이며, 중산층의 생활이 안정될수록 사회 안정에도 기여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
 - OECD 기준으로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의 기대치보다 삶의 질이 열악하고, 불안과 불만이 큼을 반영
 -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될 우려
 - 설문조사로 확보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찰
 -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08\%$ p임
 - 응답자 특성은 <별첨1> 참조

2.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황

① 중산층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국민 인식

○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소득·자산 수준과 OECD기준 중산층의 소득·자산 수준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

- 통계청(2012)에 따르면 OECD기준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4인 가족 기준)은 약 354만원이고, 자산규모는 약 2.5억원임

· OECD기준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77~531만원(중위값은 약 354만원)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9~266만원(중위값은 약 177만원)임

· 한편 OECD기준 중산층의 자산규모는 약 2.5억원임(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OECD기준 중산층이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이 중위값

의 50~150%인 경우로서, OECD와 한국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

· 한편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는 저소득층(상대적 빈곤층), 150% 이상인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정의

※가처분소득이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4대 보험료, 이자비용, 이전지출)을 뺀 소득으로서, 해당 가구가 소비지출이나 저축으로 처분 가능한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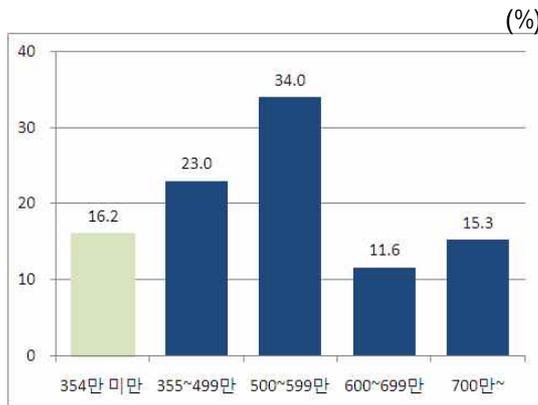
-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4인 가족 기준)은 약 500만원, 자산규모는 약 7.8억원으로 OECD기준 중산층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

·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가구소득(세금이나 4대 보험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1,015명 중 1/3이 500만원이라 답했고, 중위값도 500만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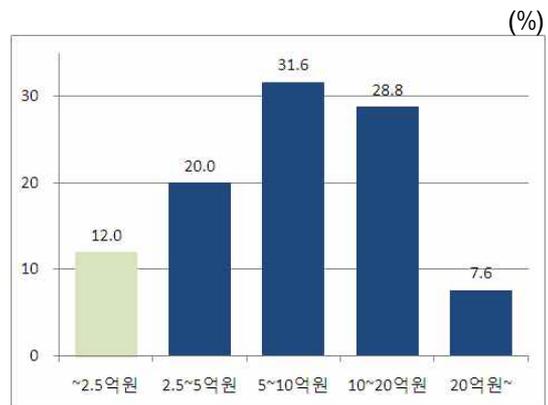
· OECD기준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인 354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6.2%에 불과하고, 354~499만원은 23.0%, 500~599만원은 34.0%, 600~699만원은 11.6%, 700만원 이상은 15.3%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쳐서 자산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7.8억원라고 답함
 - OECD기준 중산층의 자산규모인 2.5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하고, 2.4~5억원은 20.0%, 5~10억원은 31.6%, 10~20억원은 28.8%, 20억원 이상은 7.6%로 나타남
- 중산층의 소득·자산 수준에 대한 OECD기준과 국민 인식의 차이는 괴리 그 자체이자 괴리의 주된 원인이기도 함
- OECD 기준 중산층은 소득 수준만을 고려해 산출되나, 국민들의 계층의식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규모까지 영향을 끼침

< 중산층 소득에 대한 국민인식 >



< 중산층 자산에 대한 국민인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1 : 중산층 소득이란 중산층가구(4인 가족 기준)의 월가처분소득을 뜻함

주2 : 통계청(2012)에 따르면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4인 가족 기준)은 약354만원임

주3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에 따르면 중산층의 자산규모는 약 2.5억원임

②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감중산층은 51.8%로 OECD기준 중산층 61.9%보다 훨씬 적음

- 설문조사 응답자 1,015명 중에서 OECD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경우는 61.9%(628명)이고, 고소득층은 30.8%(313명), 저소득층은 7.3%(74명)임¹⁾

1) 통계청(2012)에 따르면, OECD기준으로 중산층은 65.0%, 고소득층은 20.3%, 저소득층은 14.6%임. 본 연구가 유선전화 설문조사라는 특성 등으로 인해 다소의 차이가 발생(고소득층 응답자가 다소 많고 저소득층 응답자가 다소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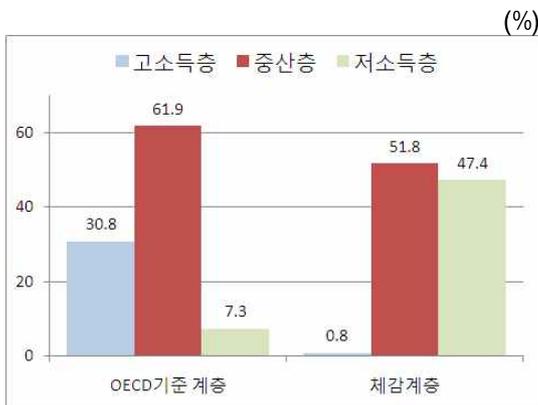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 1,015명 중에서 체감중산층, 즉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1.8%(526명)로, OECD기준 중산층(61.9%)보다 10.1%p 적음
- 본인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7.4%(481명)에 달하는 반면, 본인이 고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0.8%(8명)로 거의 없음

※체감중산층이란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로서, 주관적 판단에 기초

○ 설문조사에 따르면, OECD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과반수(54.9%)가 본인은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인식할 만큼 괴리가 심각

-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응답자가 54.9%(628명 중 345명)에 달해 괴리가 심각
-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1%(628명 중 283명)에 불과
- 한편 OECD기준 고소득층 중에서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3.5%(313명 중 230명),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4.0%(75명)이고,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6%(8명)에 불과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



< 응답자의 계층별 분포 >

		체감계층 (%)		
		고소득 (0.8%)	중산층 (51.8%)	저소득 (47.4%)
OECD 기준 계층	고소득 (30.8%)	0.8	22.7	7.4
	중산층 (61.9%)	0.0	27.9	34.0 <괴리>
	저소득 (7.3%)	0.0	1.3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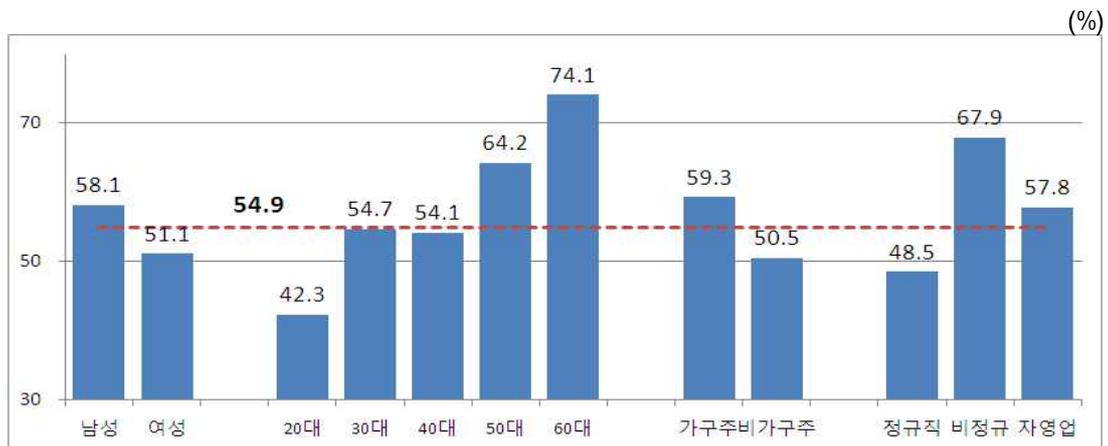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1 : '괴리'란 OECD 기준으로는 중산층이나 본인은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경우

○ 특히 남성 가구주면서 고령층인 비정규직·자영업자 중에서 괴리가 심각

- **성별** : 남성이 여성보다 괴리가 큼
 - OECD기준 중산층인 남성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58.1%에 달해, 여성의 51.1%보다 많은 수준
- **가구주 여부별** :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괴리가 큼
 - OECD기준 중산층인 가구주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9.3%에 달해 비가구주의 50.5%를 상회
 -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구주일수록 계층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괴리가 매우 심각
 - OECD기준 중산층인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4.1%에 이르고, 베이비붐세대인 50대에서도 64.2%에 달하는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42.3%로 비교적 적음
 - OECD기준 중산층 중 고령층인 경우, 미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청년들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고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괴리가 덜한 것으로 보임
- **가구주 직업별** :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정규직보다 괴리가 심각
 -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인 비정규직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7.9%에 달하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57.8%에 이룸
 - 반면 정규직 중에서는 48.5%로 상대적으로 괴리 정도가 약함

< 인구 특성별 괴리 정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괴리 정도란 'OECD기준 중산층이나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

3. 괴리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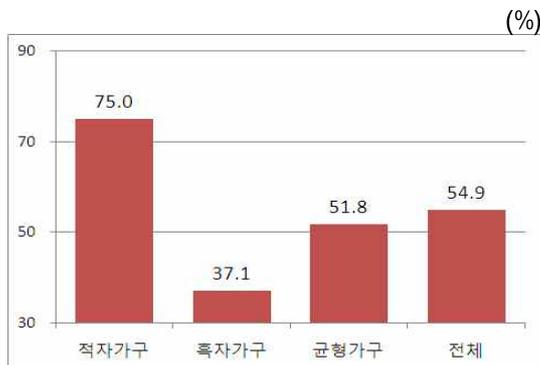
○ (가계수지 측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살림살이가 팍팍한 적자가구일수록 괴리가 심각

-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도 적자가구(가계소득<가계지출)인 경우,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5.0%에 달함
 - 반면 흑자가구(가계소득>가계지출) 중에서는 37.1%로 괴리 정도가 약함
-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없을 경우, OECD기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라 인식
 - 중산층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수지 개선, 즉 소득 향상과 소지비출 감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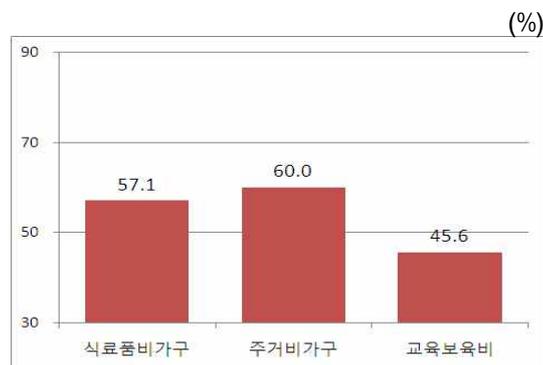
○ (지출항목 측면)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교육보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보다 괴리가 심각

-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경우,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60.0%에 달하고, 식료품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57.1%에 이룸
 - 반면 교육·보육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가구 중에서는 45.6%로 상대적으로 괴리 정도가 약함
-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과 식료품비 부담이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교육·보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히 주거비 및 식료품비 안정이 필요

< 가계수지와 괴리 정도 >



< 소비지출부담 항목과 괴리 정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1 : 괴리 정도란 'OECD기준 중산층이나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

주2 : 적자가구는 가계소득이 가계지출보다 적은 경우, 흑자가구는 가계소득이 가계지출 많은 경우

주3 : '식료품비 가구'란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뜻함

○ (체감물가 측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괴리가 심각

-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체감물가 상승률이 5.7%에 달함
- 반면 본인이 중산층이라 느끼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5.0%로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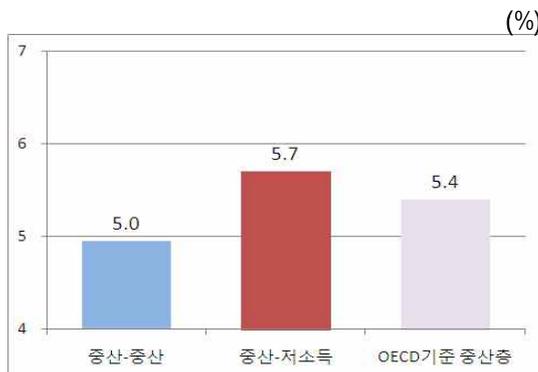
*체감물가 상승률이란 “통계청은 올해 상반기에 소비자물가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한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평균한 값

- 체감물가가 높다는 것은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뜻이며, 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일수록 괴리 정도가 크다는 분석 결과와 궤를 같이 함
- 중산층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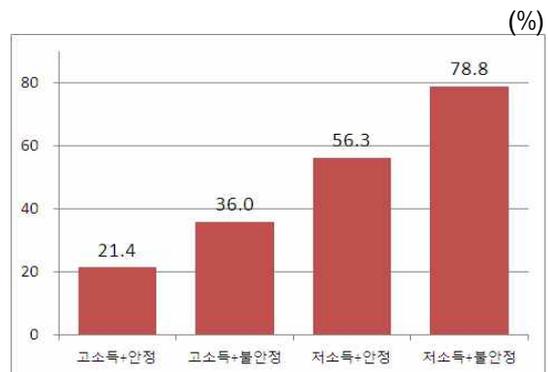
○ (일자리의 질 측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괴리가 심각

-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일 경우,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78.8%에 달하는 반면,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경우에는 21.4%에 불과
- 한편 소득은 높으나 불안정한 응답자는 36.0%, 소득은 낮으나 안정적인 경우에는 56.3%로 나타남
- 일자리는 현재소득 및 미래소득의 원천으로서, 일자리의 질이 국민들의 계층 의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산층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 즉 소득을 높이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체감물가와 괴리 정도 >



< 일자리특성과 괴리 정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1 : ‘중산-중산’이란 OECD기준 중산층이고 본인도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2 : ‘중산-저소득’이란 OECD기준 중산층이지만 본인은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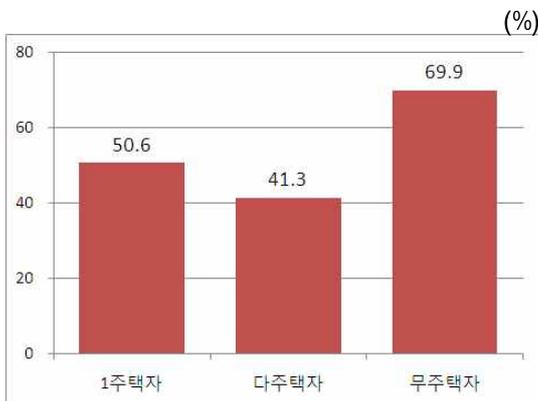
○ (주택보유 측면) 주택보유자보다는 무주택자일수록 괴리가 심각

-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69.9%에 달함
 - 반면 1주택자는 50.6%, 다주택자는 4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주택보유 여부는 중산층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통설이며, 특히 무주택자는 주거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자산규모도 작기 때문에 괴리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중산층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는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되 무리한 빚을 통한 매입은 지양
 - 또한 중·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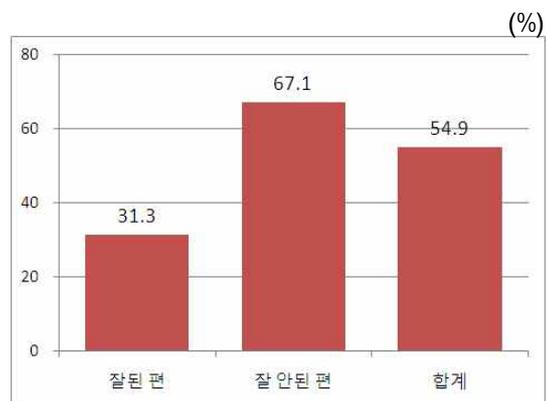
○ (노후준비 측면)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괴리가 심각

-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노후준비가 안된 응답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67.1%에 달함
 - 반면 노후준비가 잘된 경우에는 31.3%로 괴리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
- 현재의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중산층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산층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는 노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의 균형 추구

< 주택보유 여부별 괴리 정도 >



< 노후준비 정도별 괴리 정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4. 시사점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며, 소득이나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가계수지, 체감물가, 일자리의 질, 주택보유, 노후준비 등이 중산층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됨
 - 인구특성으로 보면, 고령층인 남성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
 - OECD 기준 중산층 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74.1%, 베이비붐세대인 50대의 64.2%, 비정규직의 67.9%, 자영업자의 57.8%, 남성의 58.1%가 괴리중산층
- 중산층 스스로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 첫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향상 대책 마련
 - 중산층 임금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을 높이고 고용안정성을 강화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출혈경쟁이 심한 업종으로의 신규 진입을 자제
 - 둘째, 물가 안정 및 주거 안정을 통해 가계수지 개선 지원
 - 체감물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
 - 셋째, 노후 준비 및 자산 형성 지원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강화하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인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노력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넷째, OECD 기준뿐만 아니라 국민의 계층 체감도까지 고려하여 정부정책을 펼칠 필요
 - 중산층의 상당수가 삶의 질이 낮아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인식하는 만큼, 세제개편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별첨>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1,015명	100%	소득 수준별	200만원대 이하	24.0
성별	남성	50.7		300만원대	21.6
	여성	49.3		400만원대	16.2
연령별	20대 이하	21.4		500만원대	14.9
	30대	25.8		600만원대 이상	22.7
	40대	25.2	자산규 모별	1억 미만	12.4
	50대	17.6		1~3억미만	36.7
	60대 이상	10.0		3~5억미만	19.4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45.1		5~10억미만	17.7
	非가구주	54.9		10억이상	10.1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52.3	지역별	서울	20.9
	비정규직	12.3		인천/경기	27.4
	자영업자	29.4		대전/충청/강원	13.2
	기타	6.0		광주/전라/제주	11.7
가계수지	흑자가구	32.6		부산/울산/경남	16.2
	적자가구	24.1		대구/경북	10.6
	균형가구	43.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